

독일통일의 쟁점과 한반도 통일에의 시사점

염돈재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장)

우리 국내에서 독일통일의 과정과 배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주요 쟁점들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

브란트의 동방정책, 화해·협력 정책이 독일통일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생각, 흡수통일과 조급한 통일보다는 대등한 통일, 점진적 통일이 좋다는 생각, 독일이 통일과정에서 많은 실책을 저질렀다는 생각, 아직도 독일은 심각한 통일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생각 등은 독일통일의 과정과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대표적 사례들이다.

아울러 흔히 우리는 독일보다 훨씬 심각한 경제적 통일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북한의 경제재건 여건이 동독보다 훨씬 좋아 독일보다는 훨씬 빠른 기간 내에 통일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목 차

1. 머리말
2. 독일의 통일 과정
3. 독일통일의 배경과 관련된 쟁점들
4. 통일 후 통합과정과 관련된 논쟁들
5. 결어: 한반도 통일에 주는 교훈과 시사점

1. 머리말

- 독일통일 이후 우리 국내에서 독일통일에 관해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1990년대 중반 이전, 독일통일의 내막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시기에 이루어진 데다 그 후의 많은 연구들이 이들의 연구결과를 답습하고 있어 독일통일의 배경을 잘못 이해하게 된 경우가 허다함.
- 따라서 독일통일과 관련된 주요 쟁점사항들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필요함.

2. 독일의 통일 과정

가. 동독 공산정권의 자체 붕괴

- 1989년 5월 2일 헝가리 개혁정부가 개혁의지의 표시로 오스트리아와의 국경 철조망을 철거한 것을 계기로 동독 주민의 대량 탈출이 시작.
- 10월 7일 동독 건국 40주년 행사에 참석한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이 동독의 개혁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동독 정치국원들과의 비밀회담에서 소련군의 동독시위 불개입 방침을 천명한데 이어 주 동독 소련대사가 시위의 유혈진압은 안된다고 경고.
- 1989년 9월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성당에서 소규모로 시작된 촛불집회가 서독 TV의 영향으로 급속히 확산, 10월 6일에는 베를린에서 100만 명이 참가하는 등 대규모 시위가 전국 규모로 확산되고 1989년 중 46만 명이 서독으로 탈출.
- 동독 공산잔당들과 개혁세력들은 동독의 멸망을 막기 위해 원탁회의를 구성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한편, 3월 18일 인민의회 선거를 실시했으나 예상과는 달리 신속한 통일을 약속한 서독 기민당의 제후정당인 「독일연맹」이 승리.

나. 동독주민의 서독편입 결정

- 4월 12일 로타 드메지어 연립정부가 수립되고 4월 19일 드메지어 총리가 서독 기본법 23조(기본법 적용지역 규정)에 의한 신속한 통일을 약속함.
- 통일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5월 18일 사회경제화폐통합조약을 체결되고 8월 30일 통일조약 체결, 9월 20일 동·서독 의회의 통일조약 비준, 10월 2일 동독의회 “독일민주공화국”(동독) 소멸 의결 등을 거쳐 10월 3일 통일을 달성함.

다. 2차 대전 전승 4대국의 동의확보

- 베를린 장벽 붕괴 후 11월 28일 서독정부는 「독일과 유럽분단 극복을 위한 10개항 계획」을 발표, 통일의지를 확고히 천명한 후 통일독일의 NATO 잔류를 약속하고 미국의 지원을 받아 통일외교에 착수했음.
- 소련에 대해서는 오더-나이세 국경선의 인정, 통일독일 병력의 대폭 축소(66만 5천 → 37만), 대규모 경제원조(철수비 지원 90억 달러, 매년 34억 달러의 소련군 주둔비용 부담) 등을 약속하는 한편, 미국과 협조하여 소련을 압박하면서 2+4 회담을 통해 2차 대전 전승 4대국이 동의를 확보함.

베를린 장벽 붕괴 후 11월 28일 서독정부는 「독일과 유럽분단 극복을 위한 10개항 계획」을 발표, 통일의지를 확고히 천명한 후 통일독일의 NATO 잔류를 약속하고 미국의 지원을 받아 통일외교에 착수했음

라. 체제통합 과정

- 서독체제를 동독지역에 이식하되 동독인들의 적응을 위해 일부 법규정의 적용은 1~3년간 유예하고 동독의 행정체제를 서독 체제로 개편함.
- 화폐통합, 동독 국유재산의 매각(2,564억 마르크 적자), 서독 사회보장 제도의 동독으로의 확산, 반 법치국가적 행위자에 대한 처벌, 공산치하에서의 피 박해자에 대한 보상 등을 통해 경제·사회 통합을 추진했음.

마. 독일통일의 성공 배경

- 직접적 요인

기민당 정부는**2차 대전 후 소련의****중립화 요구를 거부하고****친미·친서방 노선을****견지하면서 민주제도의****정착과 경제재건을****최우선 주력**

-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정책, 소련의 동구포기, 동독의 개혁 촉구.
- 동구권의 개혁 및 민주화 혁명 열풍.
- 공산정권에 대한 동독주민의 염증 확산.
- 동독의 경제 파탄.
- 동독 지도부의 체제수호 의지 결여.
- 서독정부의 과감하고 적절한 조치.
- 미국의 적극적 지원.

○ 간접적 요인

- 서독이 동독주민의 동경대상이 되었다는 점.
- 원칙을 고수한 서독정부의 정책(동독에 대한 국가인정 거부, 기본법 적용지역을 규정한 기본법 23조와 동독주민도 서독국적자로 간주하는 기본법 116조 국적조항의 고수, 대가없는 지원 불가 방침).
- 동독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었던 서독의 대동독 정책.
- 동독주민의 서독 TV 시청.
- 철저한 과거청산으로 주변국의 신뢰 확보.

3. 독일통일의 배경과 관련된 쟁점들**가. 독일통일은 ‘힘의 우위’ 정책의 성과인가 화해·협력의 결과인가?**

- 보수정당인 기민당(CDU)의 정책은 서독이 정치·경제·군사·도덕적으로 ‘힘의 우위’를 견지하면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는 자석이론(Magnet Theory)이 논리적 근거.
 - 기민당 정부는 2차 대전 후 소련의 중립화 요구를 거부하고 친미·친서방 노선을 견지하면서 민주제도의 정착과 경제재건을 최우선 주력.
 - 1955년에는 통일장애 요인이 된다는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NATO에 가입하고, 1979년 소련의 중거리 미사일 유럽배치 시에는 퍼싱II 미사일과 크루즈미사일의 서독 배치에 동의, 미국의 신뢰확보와 소련의 변화 촉진에 기여.
 - 대동독 관계에서는 1960년대까지는 서독의 ‘유일대표권’을 주장했으나 1982년 재집권한 콜 정부는 사민당의 교류·협력 정책을 답습하면서도 1989년 말 동독 평화혁명 시에는 ‘힘의 우위’ 정책으로 선회, 적극적으로 통일을 추진.

- 진보성향인 사민당(SPD)의 정책은 “접근을 통한 변화”에 근거를 둔 정책으로 소련·동독과 화해·협력하고 동독의 안정을 도우면 언젠가는 동독이 변해서 통일이 되거나 ‘사실상의 통일’을 이룬다는 정책.
 - 외교정책 면에서는 서독의 중립화 또는 동·서 양 진영을 오가는 ‘시계추 외교’를 모색하면서 서독의 NATO 가입을 반대하고 소련의 전유럽안보협력회의(CSCE) 구상에 적극 동조.
 - 대동독 관계에서는 할슈타인 원칙을 포기하고 동독을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하면서 양독관계 정상화를 추진하여 동·서독 간의 교류·협력을 대폭적으로 확대, 민족의 동질성 유지와 ‘분단의 고통 완화’와 기여.
 - 1989년 동독 평화혁명 시에는 동독과의 화해분위기 손상을 우려, 동독 탈출민의 수용 제한, 동독에 대한 대폭적 경제지원 및 점진적 통일을 주장하여 ‘통일을 주저하는 정당’ 또는 ‘독일통일의 최대 패배자’라는 평가를 받음.

- 독일통일은 브란트의 동방정책, 화해·협력 정책으로 동독 공산정권이 변해서 가능해진 것이 아니라 동독주민의 시위로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동독 주민들이 서독과의 통합을 원해서 이루어진 것임.
 - 동방정책으로 소련과 화해·협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르바초프의 등장이 가능했다는 주장도 있으나 소련의 변화는 1980년대 초 이후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힘의 우위에 바탕을 둔 화해정책, 전략방위구상(SDI)의 추진, 소련 중거리 미사일 유럽배치에 대응한 퍼싱 II 미사일의 유럽배치 등 ‘힘의 우위’ 정책이 거둔 성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임.
 - 동·서독 간의 교류·협력의 확대로 동독 평화혁명이 가능해졌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 논리로는 동독보다 폴란드,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에서 개혁운동과 공산정권 붕괴가 먼저 일어났다는 점을 설명하기가 어려움.
 - 1989년 동독 혁명 이후 사민당의 주장대로 동독 탈출자의 수용을 제한하고 동독에 경제지원을 하면서 점진적 통일을 모색했다면 통일이 훨씬 지연되거나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을 것임.
 - 동독 공산정권을 인정하고 안정시켜 동독의 변화를 유도하려고 한 사민당의 정책은 통일정책이 아닌 ‘분단의 평화적 관리’ 정책이었고 정통성 없는 동독 공산정권을 안정시켜 평화혁명을 지연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함.

**독일통일은
브란트의 동방정책,
화해·협력 정책으로
동독 공산정권이 변해서
가능해진 것이 아니라
동독주민의 시위로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동독 주민들이
서독과의 통합을
원해서 이루어진 것임**

독일이 이른바**‘흡수통일’ 방법을****선택한 것은****동독체제나 제도****가운데 통일독일이****계승해야 할****요소가 거의 없고****대부분의 동독주민들이****서독체제에의 ‘가입’을****원했던데 기인함**

- 더욱이 사민당 정부도 친서방 노선의 유지, 1979년 12월 “NATO의 이중결정” 수용, 대가없는 경제지원 불가 방침의 고수 등 ‘힘의 우위’ 노선을 견지해 왔다는 점에서 독일통일은 ‘힘의 우위’ 노선이 이른 성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나. 흡수통일은 바람직하지 않은 통일방법인가?

- 우리나라에서는 ‘흡수통일’은 한쪽의 의사를 다른 쪽에 강요하거나 약자의 희생을 요구한다는 점, 그리고 독일이 흡수통일로 일층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되었다는 인식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통일모델’ 또는 ‘기피해야 할 모델’로 인식함.
- 독일이 이른바 ‘흡수통일’ 방법을 선택한 것은 동독체제나 제도 가운데 통일독일이 계승해야 할 요소가 거의 없고 대부분의 동독주민들이 서독체제에의 ‘가입’을 원했던데 기인함.
- 흔히 분단된 양측이 대등한 관계일 경우 갈등과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워 통일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많으며, 이는 예멘통일이나 2010년도 국내에서의 시군구 통합 시에도 잘 나타난 바 있음.
- 또 북한과 대등한 입장에서 통일을 하려할 경우 북한과의 협상에서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고수할 것인가?

다. 신속한 통일 대신 점진적 통일을 했어야 하는가?

- 독일통일 후유증이 부각되자 우리 국내에서는 ‘조급한 통일’ 보다는 북한경제를 일으켜 세운 후 천천히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함.
- 독일의 경우 ① 동독 탈출민의 폭증을 막기 어렵고, ② 동독경제가 파탄상태였고, ③ 동독 민주정부가 신속한 통일을 요구했고, ④ 고르바초프의 실각 가능성도 예견되었으며, ⑤ 점진적 통일이 통일비용만 증가시킬 뿐 실익이 없다는 점 등 때문에 신속한 통일을 추진.
- 우리의 경우 점진적 통일을 추진한다 해서 북한체제 하에서 경제발전이 가능하거나 통일 후유증 예방이 가능할 것인가?

라. 독일통일의 최고 공로자는 누구인가?

- 독일통일의 최고 공로자로는 흔히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 브란트 전 서독 총리, 부시 미국 대통령, 동독주민 등이 거론되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콜 서독 총리의 역할에 대해서는 전혀 주목하지 못하고 있음.
-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① 동유럽의 개혁·개방을 선도했고, ② 브레즈네프 독트린을 포기했으며, ③ 동독정부의 개혁을 촉구하고 시위의 무력진압을 막았고, ④ 독일통일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독일통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
- 그러나 고르바초프는 소련과 동구권의 변화를 가져온 ‘역동성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역사의 흐름에 떠밀려 의식 없이 동유럽을 해방시켰고, 독일통일을 수락한 것도 끝까지 버티다가 서방측의 압력으로 불가피하게 동의하게 된 역사무대의 ‘수동적 배우’라는 점에서 최고 공로자로 평가받기에는 부족함.
- 그 대신, 콜 서독 총리는 1989년 9월 동독주민의 시위 초기부터 통일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고 확고한 의지와 주도적 노력으로 좁게 열린 ‘통일의 창’을 활용, 통일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독일통일의 최고 공로자로 평가받기에 손색이 없음.
 - ※ 콜 총리의 역할: ① 헝가리의 대동독 여행협정 파기 교섭(89.8), ② “독일 및 유럽분단 극복을 위한 10개항 계획”발표(89.11.28), ③ 1989년 중 동독 탈출자 46만 명의 전원수용, ④ 동서독 화폐의 1:1 교환 약속, ⑤ 동독정부의 경제지원 요구와 “조약공동체 통일방안”의 거부.

**콜 서독 총리는
1989년 9월 동독주민의
시위 초기부터 통일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고
확고한 의지와 주도적
노력으로 좁게 열린
‘통일의 창’을 활용,
통일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독일통일의
최고 공로자로 평가됨**

마. 정상회담은 동·서독 관계개선의 돌파구가 되었는가?

- 동·서독이 1970년 1-2차 정상회담을 개최한 후 동서독기본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도 남북 정상회담이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생각하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동·서독은 베를린 장벽 붕괴 이전까지 총 4회에 걸쳐 공식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나 1987년 9월 서독에서 있었던 콜-호네커 정상회

**남북정상회담이
관계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하에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의도와 득실을 면밀히
분석한 후 추진함이
바람직함**

담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음.

- 1970년 3월 및 5월 개최된 1-2차 정상회담은 서독과의 접촉을 체제 위협 요인으로 생각한 동독이 소련의 중용에 따라 마지못해 서독 측 제안에 응한 회담으로 상호견해차이만 확인했을 뿐 전혀 성과가 없었으며, 1972년 동서독기분합의서는 소련이 강경파인 울브리히트 서기장을 호네커로 교체한 후 체결 가능.
- 1981년 슈미트-호네커 간에 동독에서 개최된 정상회담도 소련의 중용에 따라 서독 측 제안에 응한 회담으로 일부 합의사항은 있었으나 슈미트가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평가한 회담이었으며, 1987년 회담은 경제난에 처한 동독이 경제지원을 얻기 위해 응한 회담으로 그 후 인적·물적 교류 확대에 크게 기여함.
- 따라서 정상회담이 관계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하에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의도와 득실을 면밀히 분석한 후 추진함이 바람직함.

바. 동독정부가 서독 TV 시청과 방송교류를 허용한 것은 화해·협력 정책의 성과인가?

- 동독주민들이 서독 TV를 시청할 수 있었던 것이 독일통일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이 알려지자 일부 정치인들이 북한과의 방송교류를 제안하기도 했고 각 방송국들도 다투어 북한과의 방송교류를 추진함.
- 동독은 1953년 동베를린 봉기가 서독 리아스(Rias) 방송 때문이라고 판단, 서독 방송 청취를 엄격히 금지해 왔으나 1971년 이후 서독 TV 시청을 허용하고 1986년 문화협정 체결 이후에는 프로그램의 교환 등 방송교류도 추진함.
- 동독정부가 서독 TV 시청을 허용한 것은 서베를린에서 송출되는 전파 차단이 어렵고 서독방송 청취금지가 주민들의 큰 불만사항이 되었기 때문이었으며, 특히 보안기관(Stasi)은 방송개방에 적극 반대함.
- 따라서 북한이 우리와의 방송개방이나 실질적인 방송교류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함.

사. 2+4 회담과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는 독일통일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가?

- 2+4 회담은 독일통일의 대외적 문제를 종결하는 기제(mechanism)가 되었고 CSCE 정상회의에서도 독일통일을 만장일치로 승인, 독일통일이 주변국의 ‘축복’ 가운데 이루어 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동북아다자간안보협의체(Mini-CSCE)와 6자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그러나 2+4 회담은 미국이 소련의 평화회의 개최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제안한 회담으로써 2+4회담 개최시기를 가급적 지연시켜 동서독(Two)이 먼저 통일에 합의한 후 2차 대전 전승 4대국(Four)이 이를 추진토록 했다는 점, 중요한 결정은 2+4 회담 밖에서 양자협상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독일통일의 ‘조장자’가 아닌 ‘형식적 추진자’에 불과했음.
- 따라서 통일을 염두에 두고 현재의 6자회담을 보다 구조화하거나 다자간안보체제로 발전시키는 문제는 보다 신중히 검토가 필요함.

아. 독일통일은 ‘돈 주고 산 것’ 인가?

- 독일 통일시 독일이 소련군 철수비용 67억 유로, 소련군 주둔비용 75억 유로, 기타 차관 등 대규모 경제지원을 했다는 점 때문에 독일통일은 ‘돈 주고 산 것’이라는 평가도 대두됨.
- 소련은 끝까지 버티다가 국제정세 변화와 경제파탄으로 국제적 영향력이 현저히 약화된 데다 미국, 영국, 프랑스가 연합하여 소련을 제외한 채 독일통일을 수락할 것이라고 위협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독일통일을 수락함.
- 소련이 서독의 대규모 경제지원을 받은 것은 불가피하게 독일통일을 수락해야 할 상황에서 부수적으로 챙긴 이득일 뿐 독일통일을 수락하게 된 핵심적 요인은 아니었음.

소련이 서독의 대규모 경제지원을 받은 것은 불가피하게 독일통일을 수락해야 할 상황에서 부수적으로 챙긴 이득일 뿐 독일통일을 수락하게 된 핵심적 요인은 아니었음

독일정부가 어떤 정책과 노력을 통해 “20세기의 기적”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재성찰이 필요함

4. 통일 후 통합과정과 관련된 논쟁들

가. 독일은 통일과정에서 많은 ‘정책적 실수’를 저질렀는가?

- 국내 학자들은 독일은 조급한 통일로 실책이 많았으므로 ‘반면교사’로 삼아 후유증 없는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 관계자들도 “선발자의 영광은 독일에게, 후발자의 이득은 우리에게”라면서 후유증 없는 통일방안 짜기에 열중함.
- 그러나 국내 인사들이 지적한 대부분의 ‘실책’은 독일정부가 그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불가피하게 선택한 차선택이었을 뿐 실책이 아니었음.
 - 화폐 교환비율을 시세보다 높게 책정한 것은 ① 통일열기의 조장, ② 동독주민의 저축 보호, ③ 동독주민의 이주물결 억제, ④ 동독정부의 강력한 요구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정치적 결정이었음.
 - 동독기업의 급진적 구조조정은 「경제 5賢」의 권고에 따른 것이며 옳은 방법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 몰수재산의 “반환우선 원칙”은 통일조약의 위헌판결 가능성과 동독 출신자들의 정치적 압력을 고려한 조치임.
 - 동독경제 상황을 과대평가한 것은 동독의 통계부실과 통일 후 동독 경제의 급속한 붕괴에 기인한 것으로 정책적 실수는 아니었음.
- 그 대신, 독일인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정책적 실수’는 다음과 같은 것들임.
 - 통일초기 정치인들이 너무 많은 장밋빛 약속을 한 것.
 - 베를린 장벽붕괴 전까지 통일에 전혀 대비하지 못한 것.
 - 동독의 경제상황을 과대평가한 것.
 - 통일 후 세금을 더 많이 올리지 않은 것.
 - 동독경제 재건에 필요한 기간을 과소평가한 것.
 - 서독제도를 너무 빨리 이식하려 한 것.
 - 동독 노동자의 임금을 너무 급속히 인상한 것.
 - 동독지역 행정개편 시 동독 측 인사들에게 더 많이 자율권을 주지 않은 것.
- 이렇게 볼 때 독일통일은 ‘실패사례’가 아닌, ‘성공사례’로 보아야 하며, 특히 독일정부가 어떤 정책과 노력을 통해 “20세기의 기적”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재성찰이 필요함.

나. 통일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소요된 잘못된 정책 때문인가?

- 통일 직전 서독정부는 1994년까지 4년간 1,150억 마르크의 통일비용 (약 69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고, 통일 직후에는 10년간 2조 마르크(약 1조 360억 유로)의 통일비용을 예상함.
- 독일정부는 2005년까지 15년간 1조 4,000억 유로를 투입했으나 아직도 연방예산의 25% 정도를 동독지역에 투입해야 하며, 통일비용 지출액의 60%가 연금 및 보험금 지급 등 소비성 지출이어서 문제점으로 대두됨.
- 예상보다 훨씬 많은 통일비용이 소요된 것은 ① 예상보다 훨씬 열악한 동독의 경제상태, ② 동독경제의 급속한 붕괴, ③ 동독 국유재산 가치의 하락, ④ 동독 내 투자여건 악화 등 주로 정책외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책실패 때문은 아니었음.

다. 독일통일 후유증은 아직도 심각한가?

- 통일 후유증
 - 통일 이후 매년 연방예산의 25~30%, 1991년부터 2005년까지 15년간 총 1조 4천억 유로(2,540조 원)을 동독지역에 투입한 데다 그 중 60%가 소비성 지출이어서 성장 둔화, 재정적자 확대, 실업증가로 “유럽의 병자”로 평가.
 - 동독주민들은 서독체제에의 적응상의 어려움, 실업의 공포, 2등 국민 의식으로 어려움을 겪은 반면, 서독주민들은 통일비용 부담을 불만스럽게 생각.
- 통일 후유증의 극복
 - 2003년 이후 내핍정책인 「어젠더 2010」 추진을 계기로 경제적 후유증을 대부분 극복, “필필나는 독일경제”로 부활.
 - 1993년 -1.6%였던 성장률이 2006년 3.5%로 호전되고 수출은 1조 1,120억 달러로 세계 1위를 탈환했으며 1991년 서독지역의 35%에 불과하던 취업자 1인당 생산량이 2007년에는 77%에, 주민소득은 서독지역의 83%에 도달.
 - 동독주민들이 아직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나 동독시절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사람은 15% 정도에 불과하고 메어켈 총리, 티어제 전 연방상원 의장, 플라첵 사민당수 등 동독출신이 통일

예상보다 훨씬 많은 통일비용이 소요된 것은 예상보다 훨씬 열악한 동독의 경제상태, 동독경제의 급속한 붕괴, 동독 국유재산 가치의 하락, 동독 내 투자여건 악화 등 주로 정책외적 요인에서 비롯된 데 기인함

한반도 통일의 경우

**동·서독에 비해 남북
간 갈등수준이 높고,
강력한 체제수호 세력이
있고, 경제격차가
크다는 점에서 더욱
불리한 측면도 있음**

독일의 지도자로 부상, 2등 국민 의식도 상당히 극복.

- 이제 남은 문제는 인간사회 어디서나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라는 것이 독일인들의 일반적 인식.

○ 독일통일 후유증이 부각된 배경

- 서독은 2차 대전 이후 호황만을 누려와 독일인들은 통일후 경기침체를 ‘자존심의 손상’으로 받아들이면서 안정된 사회보장 체제의 동요를 우려.

- 독일은 분단 당시 ① 전쟁의 공포도 없었고, ② ‘이산의 고통’이 적었고, ③ 분단비용도 높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의 실익을 느끼기 어려운 상황.

- 독일은 74년에 불과한 통일국가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다 2차 대전 이후 민족의식을 부추기는 행위가 금기시 되어 민족의식이 높지 않았으며 정치 지도자들도 통일 후유증 극복을 위해 민족의식을 동원하기가 어려운 입장.

- 통일작업을 위해서는 고통 감내가 필요한 데다 통일 후 걸프전 비용 지원, 소련 및 동유럽 원조 등 국제적 부담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통일후유증 문제가 더욱 부각.

- 우리 국내에서는 흡수통일 불가론, 점진적 통일론, 대북한 경제지원 필요성 등을 주장하는 논거로 독일통일 후유증이 자주 거론된 데다 독일통일에 반대한 사회당 계열 인사들이 우리 언론에 자주 등장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라. 한반도 통일 시에도 독일과 같은 통일 후유증이 재현될 것인가?

○ 우리의 경우 동·서독에 비해 ① 남북 간 갈등수준이 높고, ② 강력한 체제수호 세력이 있고, ③ 경제격차가 크다는 점에서 더욱 불리한 측면도 있음.

○ 그러나 독일의 통일 후유증이 증폭된 된 것은 ① 동독 국유재산 가치의 대폭적 하락, ② 동독경제의 급속한 붕괴, ③ 열악한 동독지역 투자여건 등에 기인한 것으로 우리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이 적음.

- 동독 국유재산 가치가 ① 동독경제의 국제경제에의 급속한 노출, ② 동독 내 매물 격증, ③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 인접지역에서의 매물 급증 등으로 급격히 하락.

- 통일 후 동독지역 경제가 ① 급진적 구조조정, ② COMECON 경제체제의 붕괴, ③ 동독 주민의 동독물품 배척, ④ 동·서독 노조의 담합에

의한 급격한 임금상승, ⑤ 낙후된 생산설비, ⑥ 숙련노동력의 이탈, ⑦ 동독 기업인의 경영능력 부족 등으로 급격히 몰락.

- 동독지역 투자여건이 ① 인플레이 우려에 따른 이자율 인상, ② 급격한 임금인상에 따른 노동비용 증가, ③ 인프라의 미비, ④ 세제혜택 및 산업부지 제공 등 인센티브의 부족, ⑤ 엄격한 환경규제와 인허가 절차, ⑥ 여타 동유럽 국가들의 상대적으로 좋은 투자여건, ⑦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의 어려움 등에 따른 투자여건의 악화.
- 우리의 경우 ① 북한의 부동산 사유화 수준이 낮은 반면 토지와 지하자원 등 국유재산 가치가 높고, ② 해외시장 개척으로 북한경제의 급속한 붕괴 예방이 가능하고, ③ 투자유치 여건이 좋아 북한경제의 신속한 재건이 가능.

- 따라서 우리의 경우 ① 통일편익이 훨씬 높고, ② 북한주민이 통일의 편익을 쉽게 느낄 수 있고, ③ 통일후유증 극복을 위해 민족의식을 동원할 수 있고, ④ 북한경제 재건여건이 좋아 정치적 통합이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통일 후유증이 훨씬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북한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북한 정권과의
꾸준한 대화·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대북지원은 면밀한
전략적 고려 하에서
추진해야함**

5. 결어: 한반도 통일에 주는 교훈과 시사점

- 북한주민의 동경대상이 될 국가·사회의 건설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이고 북한정권과의 화해정책은 굳건한 안보와 힘의 우위가 뒷받침되어야 성공 가능.
- 북한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북한 정권과의 꾸준한 대화·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대북지원은 면밀한 전략적 고려 하에서 추진해야 함.
- 「통일 후유증」은 불가피한 「분단후유증」이라는 인식 필요하고 진정한 통일을 위해서는 나눔의 자세가 중요하며, 예고 없는 통일기회 도래에 대비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함.

기획 및 감수: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고정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김석범 (제주평화연구원 인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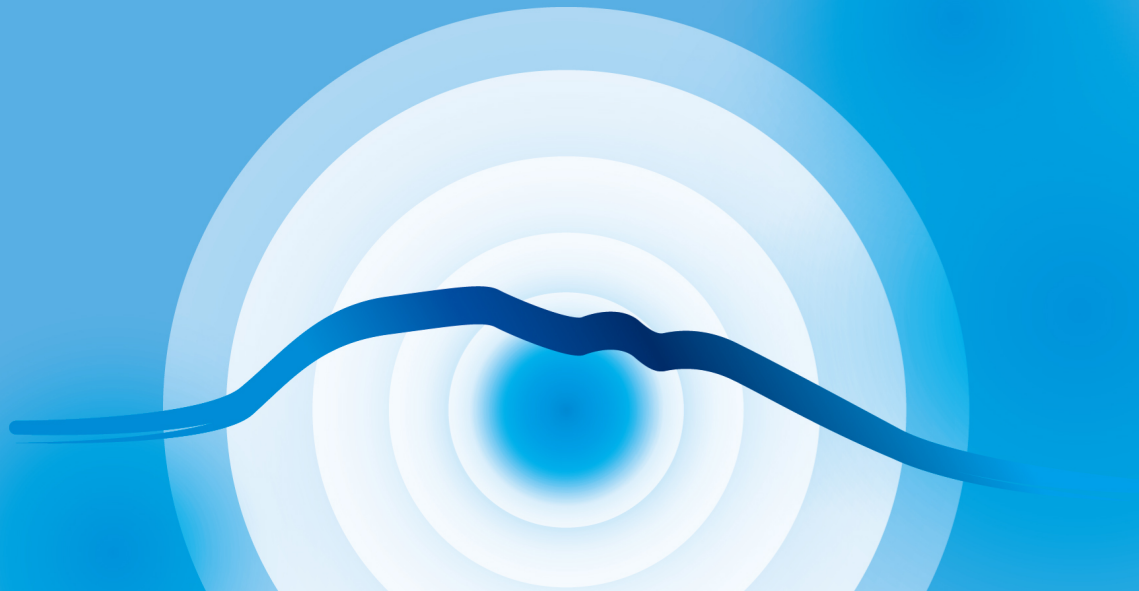
저자 약력

■ 염돈재

現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장으로 재직 중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음. 독일통일 직전인 1990년 8월부터 3년간 주독일대사관 공사로 근무하면서 독일통일 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보았음.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국가정보원 제1차장(해외담당)을 역임하였음. 저서 『올바른 통일 준비를 위한 독일통일의 과정과 교훈』 및 독일통일에 관한 논문 및 평론 다수가 있음.

참고문헌

- 바크, 테니스 L. · 그레스, 데이빗 R.(서지원 역). 「도이치현대사 1-4」, 서울: 비봉출판사, 2004.
- 쇼이히, 에르빈 카 · 쇼이히, 우테(김종영 역). 「독일통일의 배경」, 서울: 종로서적, 1992.
- 염돈재. 「독일통일의 과정과 교훈」,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10.
- 젤리코, 필립 · 라이스, 콘돌리자(김태현 · 유복근 역). 「독일통일과 유럽의 변환」, 서울: 모음북스, 2008.
- 주독한국대사관. 「독일분단으로부터 통일까지 약사」, 1991.
- _____. 「독일통일소사전」, 1992.
- _____. 주독한국대사관.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1993.
- 콜, 헬무트(김주일 역). 「나는 조국의 통일을 원했다」, 서울: 해남, 1998.
- 크놉, 귀도(안병익 역). 「통일을 이룬 독일 총리들」, 서울: 한울, 2000.
- 텔치, 호르스트(윤여덕 역). 「329일」, 서울: (주)한독산학협동단지, 2007.
- 폰트, 엘리자베스(오정환 역). 「장벽을 넘어서」, 서울:(주)한국논단, 1994.
- Hancock, M. Donald · Welsh, Helga A., eds. *German Unification: Process & outcome*, Boulder: Westview Press, 1994.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6회 제주포럼

새로운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2011. 5. 27 ~ 29

해비치 호텔 & 리조트 제주

-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 국제평화재단 / 동아시아재단
- 주관: 제주평화연구원
- 후원: 외교통상부 / 국토해양부 / 대통령직속미래기획위원회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한국국제교류재단 / 동북아역사재단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 제주대학교 / PRIO / 코리아 DMZ협의회 /
UN거버넌스센터 / 대한지질학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572 (697-120)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5-651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 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